

민주연구원 '행정통합, 권역별 동향과 해외 사례의 함의'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4월 25일(금), 『행정통합, 권역별 동향과 해외 사례의 함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메가시티 대 메가시티가 경쟁하는 세계적 변화 흐름에 발맞춰 현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별 국가재정 지원·지역 위상 강화·공공기관 이전 우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네 가지 큰 변화를 동시에 진행, 통합특별시라는 큰 틀에서 작은 단위에서는 어려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 유일하게 행정통합이 결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행정통합 권역별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 행정통합 주요 사례를 제시하여 향후 통합특별시 추진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행정통합 관련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남충북대전 세종 네 개 지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주요 사례로 시사점을 제안했다.
 - 첫째, 전남광주는 여러 초광역권 중 유일하게 올해 통합특별시로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후보로 확정된 민형배 전 국회의원은 경제통합, 균형성장, 시민주권을 통합특별시의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 둘째, 부산울산경남은 이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 출신 부산경남 시도지사의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울산이 제외된 구도로 논란이 제기되었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추진이 일부 지역의 반대로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충남충북대전세종은 충청광역연합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전충남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원하겠다는 발언 이후 돌연 시도지사의 입장이 바뀌

며 중단된 상황이다.

- 셋째,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행정통합이 산업·교통·교육·재정 등 여러 부문을 하나로 묶어 규모·속도의 경제를 만들고, 주민에게는 더 넓고 더 가까운 생활권 제공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넷째, 구체적으로 영국은 중복 사무를 줄여 주민에게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도 단층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초 단위 지역의 규모 적정화는 인력·재정·조직 등 지역의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추진이 어려운 업무는 중간 단위 협력으로 지원한다. 프랑스는 규모의 작은 자치 단위의 협력·연계 및 단계적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 보완하며 중복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시대적 과제에 맞춰 시정촌 단위의 행정통합을 반복하며 행정수행 능력과 생활권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

○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이 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통합 정책의 방향 제시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